

임채진 검찰총장 중도사퇴 배경

# 인간적 고뇌속 '檢 책임론' 덜기

### “평상심 잃어 조직 지휘 부적절”...千 영장 기각에 결심 굳혀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재차 사직서를 낸 데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에 이어 천신일 세종나모어행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에다 검찰이 청구한 천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자 남은 수사마저 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는 부담감이 그의 결단을 재촉했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임 총장이 이날 내놓은 '사퇴의 변'에서도 뒷받침된다.

임 총장은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을 갖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높여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내내 검찰을 계속 지휘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퇴의 변에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비등해진 '검찰 책임론'에서 검찰의 부담을 총수로서 조금이라도 덜어줬다는 생각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참여정부 관련 인사와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을 '저

인망식'으로 수사한 데다 수사 정보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여론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검찰 책임론을 촉발했다.

평소 '절제와 품격'을 강조하던 임 총장 자신의 신념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상황이 초래됐고, 검찰 조직 전체에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언론 보도의 홍수 속에서 '핀셋으로 환부만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는 임 총장의 뜻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임 총장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적인 반비과 갈등도 그의 결심을 재촉한 배경으로 보인다.

그가 사퇴의 변에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제가 검찰을 계속 지휘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부분에서 자연인으로서 이런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지난달 29일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경환 법무 장관은 '나머지 수사를 마치는 게 급선무'라며 이를 돌려보냈고, 임 총장도 이를 일단 수긍하고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천신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를 재개했다.

천 회장이 현 정권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만큼 검찰이 그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독립한 부패척결이라는 검찰의 대의명분을 충분히 살리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떠안은 검찰 책임론을 희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 진행했던 천 회장의 구속영장이 2일 밤 기각되자 임 총장은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한달 이상 장기화할 것이 확실시되자 수사의 총 책임자로서 임 총장은 '사면초가'에 빠져버린 셈이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 영장이 기각된 데다 관련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 이어서 수사가 길어지게 됐고, 시일이 지날수록 정치적 편파 공방이 증폭되면 검찰에 집이 될까 봐 임 총장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에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오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달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때 임채진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대검청사를 나서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

### 검찰 '차 게이트' 수사 표류 위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천신일 세종나모어행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표류 위기를 맞게됐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8일 만에 재개된 수사의 동력이 급격히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이 겨냥한 검찰의 책임론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를 재개하면서 먼저 '살아있는 권력'인 천 회장의 구속을 통해 난국을 정면 돌파하려던 시나리오가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형성된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선택한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는 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였다.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기업인 친구라는 점에서 구속하는 데 성공한다면 야권 등에서 줄기차게 제기해온 형평성 시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데는 '검찰의 표적 수사'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상황에서 권력 핵심부인 천 회장의 구속을 통해 이번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천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함으로써 천 회장 구속을

발판으로 삼아 여론 핵심부로 진입하려던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대척점에 위치해 '살아있는 권력'으로 분류된 천 회장과 여론 실세들의 금품 수수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힘으로써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은 일단 물거품이 된 셈이다.

특히 수사팀 교체 또는 중수부 폐지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이번 수사 전체의 당위성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을까 검찰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천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이번 수사의 동력이 크게 약해진 만큼 향후 여야 현역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관계 인사들의 수사에 탄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연차 전 회장이 검찰 조사나 법정 진술에서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극적으로 시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뇌물수수 의혹으로 코너에 몰렸던 인사들을 압박할 마땅한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을 겨냥한 여·야 모두의 공세가 커지면서 공직자비리, 부패수사처(공수처) 또는 상설특검 도입, 피의자 실 공표 금지 법제화, 검찰 기소독점주의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여 검찰이 어떤 반전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정부, 盧 前대통령 수사 사과하라”

### 서울대·중앙대 교수들 시국선언...광주·전남 교수들도 10일 발표

서울대 교수들은 3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대 교수들도 시국선언문을 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대와 중앙대의 시국선언에 이어 다음 주 초 연세대의 시국선언이 예정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학 교수들이 6·10환쟁을 맞아 오는 10일 공동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 교수들은 3일 오전 교내 신앙인문화술정보관에서 교수 124명의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상 문제들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또 현 정부 들어 촛불집회 참가 시민에게 소환장이 남발되고, 인터넷과 집회·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등 민주주의 원칙들이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 파문으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한반도 대운하'가 '4대강 살



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갑수(왼쪽 세번째) 교수가 3일 서울대 신앙인문관 회의실에서 서울대 교수 124명의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기'로 탈바꿈해 되살아났으며, 지난 10여 년의 대북정책 성과가 위협에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려던 현 정부와 집권당이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하고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위기를 맞아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응산참사 피해자에 대해 결맞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연세대에서도 일부 교수를 중심으로 시국선언 준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지역 교수들도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한 우려와 정부 정책의 방향이 사회통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국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교수들은 아직 구체적인 시국선언 내용이나 참여 교수 등을 확정할 상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수 일간 토론이나 협의를 통해 시국선언을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변함없이 늘 사라져- 건강보험은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매년 거액의 그날로, 매년 빈곤한 삶에도- 20년을 건강하게 국민 건강 지켜주는 건강보험! 언제나 국민당에 있고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 모두가 지켜주시라.

# 盧 서거, 李 대통령 사과 요구

### 광주·전남 추모위, 책임자 처벌도 촉구

광주·전남지역 300개의 시민·사회·종교·여성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광주·전남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는 3일 광주시 동구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하고, 서면적인 국정쇄신을 현 정부에 촉구했다.

추모위는 특히, 저인망식 수사와 피의자실 공표, 장기간에 걸친 수사 등 권력을 남용해 스스로 정치적 독립성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검찰을 개혁하고, 이를 지휘·감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중앙수사부장의 처벌을 요구했다.

추모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정치문화를 혁파하고,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우리의 책임을 다했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권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형호기자 khh@

# “서울광장 봉쇄는 국가 공권력 남용”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3일 최근 경찰이 연일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집회를 봉쇄한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불법·폭력성 여부를 사전 판단해 집회 개최 여부를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식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